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6 (2010. 5), 301-307.

서 평

##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 투표의 계층/계급 대표성에 대해서\*

양 호 경\*\*

초등학교에서 반장과 임원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하던 행위와 연간 만 19세 이후에 갖는 신성한 정치적 투표 행위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초등학교에서는 종이에 적어서 내던 무기명 비밀투표인 반장선거, 이후 거수로 뽑던 줄반장, 교사가 한명을 지명하고 다 같이 박수를 치는 절차로 선출(임명에 가까운)되던 청소반장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 개인의 의사가 표현되었다. 우리는 53명중에 한명이 되어 “김 아무개”를 적어내든, 9명 중 한명으로 손을 드는 방식으로든, 아니면 투표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방식으로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회상해보면 반장선거의 투표는 후보 중 한명이 지나가는 길에 과자를 사주었거나, 혹은 동네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축구를 잘하는 아이, 혹은 잘생긴 아이 중에서 선택이 되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투표는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물론 반을 잘 이끌어 갈 리더십이 있거나 하는 등의 대의적인 측면도 생각을 했겠지만, 학기 초 잘 모르는 학생들끼리 하는 투표에서, 초등학생의

\* 손낙구,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후마니타스, 2010)에 대한 서평.

\*\* 국회 권영길 의원실 정책비서관.

통찰력으로 바라본 리더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회의적이다.

성인들의 투표도 개인적인 행위이기에 대부분 비슷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동향 출신인지 아닌지, 정당이 소위 우리 지역 정당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힘을 써줄 수 있는 큰 정치인인지, 아니면 본인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등의 무척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개인의 이해관계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그것이 지역적 구분이든지, 계층/계급적 구분이든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대부분 찍게 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행위이고, 그 분배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권 및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입법부에는 예산을 승인할 권한을 준다. 결국은 국민들이 절차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투표이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은 그 투표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책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는 해묵은 계층/계급 배반투표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저자가 1,700페이지 가량의 두꺼운 책에서 수도권 각 동네별 투표율과 정당 지지율, 주택소유비율, 대출이상 학력자비율, 2년 이내 주거 비율, 종교인 구성 비율 등을 지루하게 나열해 놓으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계층/계급 배반투표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특정 정당이 과연 특정 계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 정도에 따라 뚜렷하게 계층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유권자들은 개인별 직업이나, 소득보다는 주택으로 대변되는 “자산”에 따

라 투표 성향이 갈라진다는 이야기이다. 저자는 “소득차이가 아니라 자산의 차이가 교육이며, 문화·생활격차를 가장 잘 드러낸다.”<sup>1)</sup>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차이가 투표성향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니계수는 0.35로 매년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지니계수는 0.89로 극단적으로 소수에게 몰려 있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 정치적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자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닌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방 사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2년에 한 번씩 떠돌며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만, 투표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곧 떠나야 할 곳일 뿐이다.” 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고, 먹고 사는 문제 자체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정당)의 부재이다. “흔한 말로 ‘그놈이 그놈인데 뭣 하러 투표를 하나’는 정서인 것이다. 문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아니라 투표할 이유 자체를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정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저자의 지적은 2010년 현재 서민을 위한다는 제1야당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다던 진보정당들에게는 뼈아픈 이야기 아닐 수 없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고, 별로 와 닿는 대안세력도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 서울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10개 지역은 동네 가구 중 84%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투표율이 낮은 10개 지역에서 집을 소유한 사람은 26%에 불과하고 무주택자가 74%에 달한다. 거기다가 무려 17%는 반지하나 옥탑방등에 산다.

1)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

필자도 과거 녹녹하고 곰팡이가 피던 반지하 방에 살았었는데, 대부분의 그런 가정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8시나 9시 다 되어서 퇴근을 하게 된다. 퇴근하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나면 또 다음날의 생계활동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라면 선거일 휴일이 되어도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작업장으로 나가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육체적 피곤함에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2년 뒤면 또 다른 지역으로 방을 옮겨야 하는데 동네에 큰 도로가 생긴다거나, 스포츠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모모 국회의원의 공약이 귀에 들어오겠는가.

반대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소득이 높은 가정은 동네 네트워킹이 강한 편이다.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아이들 교육이나 갖가지 여가 활동들을 중심으로 인적교류가 잘되어 있다. 자연스레 동네 여론이 생기게 되고, 선거 시기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집값을 높여줄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똑똑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투표율이 높은 지역의 전문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86%이고, 투표율이 낮은 지역의 전문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학력차이-소득(자산)차이-정치적 선택 유무라는 느슨한 연계가 비율 차이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며, 현재의 민주당, 혹은 진보정당들에 대한 경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념에 대한 판단은 이견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나라당이 조금 더 시장경제우선이며, 고소득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등 경제적 상위계층 중심의 정책을 편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한다. 결국 똑똑하고 잘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고, 한나라당에 투표를 많이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저소득층-낮은 투표율-평등 중심정책, 고소득층-높은 투표율-경쟁과 효율중심 정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가장 잘 나타났다. 당시 경쟁교육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강조하던 공정택 후보와 평등과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를 주장하던 주경복 후보의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단 8개구에서만 승리했지만, 17개 구에서 승리한 주경복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그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로 이 지역에서 공정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주경복 후보의 지지도의 2배가 넘었다. 투표율과 절대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공정택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에서 제기하는 동네별 계층과 투표행태분석에 대해서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집합수준의 자료로 개인수준의 투표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숙 교수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는 경향성을 의미할 뿐이지 논리적인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 조교수는 계층/계급이 아니라 “의식”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한다.

필자가 보기에 각 정당이 스스로의 정치적지 기반을 배반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계층/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투표를 하는지는 의문이다. 소위 선거실무를 할 때 당선되기 위해 중요한 3가지는 계층이나 계급이 아니다. 소위 ‘선거 기술자’들은 구도가 좋고, 인지도가 높고, 조직만 있으면 된다고 표현을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구도가 갖춰지면 “경제”에 어울리는 후보가 이긴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선거등 후보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선거에서는 결국 조금 더 “아는 사람”, “이름이라도 기억나는 사람”을 찍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커다란 틀에서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는 조직싸움(누가 누구의 친척이고, 누가 어떤 단체의 총무이며 등의)이라고 선거판의 소위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물론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그것처럼 한 개인이 투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 개인의 성향이 정치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CEO라서 기업법인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라는 정책을 내건 정당에 투표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같은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 호남성향의 정당에

투표를 할 수도 있으며, 후보가 자신이 나온 학교의 같은과 선배라서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월드컵 유치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을 지지하거나 좋아했던 연예인이라서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선택은 복잡적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에서 각 계층/계급이 스스로의 이해기반에 맞게 투표를 했었다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입증 노력은 현재에 대한 해석보다 미래에 대한 지향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행위이고, 국가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 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으로 입법부는 예산 승인권으로 나타나고, 그 권위는 결국 유권자의 투표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다.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는 관념화된 이념의 문제나 정치적 이슈보다 훨씬 한 개개인 국민들에게 고귀한 문제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저소득층 주택보조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부자인데 누진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도 결국 자산과 학력이라는 문제로 투표율을 분석하면서 선거 결과와 완전 일치하는 선거용 백과사전을 만든 것이 아니다. 저자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해기반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또한 정치세력들도 자신의 이해기반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한다.

최장집 교수는 “현실정치에서 경쟁하는 세력들이 추상적이고 관념화된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 즉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완벽하게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당은 없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인도 없다. 유권자 또한 결국 찍을 수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다. 정치인이든 유권자든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부

분의 “정치적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백악관 보좌관들의 이야기인 미국 드라마 <The West Wing>에 보면 “메이저 리그 야구는 팀당 1년에 162게임을 하는데 최고의 팀도 54게임 이상은 지고, 최악의 팀도 54게임 이상은 이긴다. 우리가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54게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All or Nothing”의 목숨을 건 관념적 정치싸움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합의를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정책과 철학으로 논의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도 스스로의 지지기반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을 실천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투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수도권편』은 그러한 사회경제적 자료를 어떻게 가공해서 정치적인 의지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